

건축 시공 대충대충·관리감독 뒷짐 ... 사고나면 “나몰라라”

**불안한 광주·전남
바꾸자 안전지대로**
 <4>불안한 건축물 ... '책임 불감증'

광주 15년 이상된 아파트만 1145곳
 시설 개선 옥상 방수 등 그쳐 '겉핥기'
 공사중 건물에 주민 입주 '불안한 거주'
 행정당국·관리자 안전 의식 강화 시급



붕괴 위험으로 출입 금지된 광주시 북구 중흥동 평화맨션.



여기까지가 불법

세월호 침몰 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정부는 공언했지만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안전 불감증은 쉽게 바뀌지 않고 있다. 광주시 광산구 소촌동 연립주택은 준공을 앞두고 있다가 느닷없이 철거되는 증으로, 주민들은 사용승인이 나지도 않은 건물에서 포크레인 소리를 들으며 불안하게 살고 있다. 관련 법이 무시되고 관리 감독도 전혀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일인데, 책임지겠다는 목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는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광주지역 특정관리대상시설 아파트 안전등급현황

계	A급	B급	C급	D급	D급	
					위치	준공일
1,145	2	1,112	27	4	화정삼익아파트 1동	1979
					화정삼익아파트 2동	1979
					화정동 영화아파트 2동	1983
					장미아파트 6동	1981

※ 준공후 15년 이상 경과된 5~15층 이하 아파트(공동주택)

■ 2014년 시도교육청 재난위험시설 현황

교육청	학교명	건물명	준공연도	등급	해소계획	현재진행상황	사용현황	
전남	광주	송정초	가가동	1969	D	개축	공사	중지
		임자남초	별관동	1965	D	개축	설계	사용
		화순초	별관동	1965	D	개축	예산	사용
		대덕초	별관동	1969	D	개축	공사	중지
		장성분양초	본관동	1973	D	개축	설계	사용
		조성중	본관동	1979	D	개축	공사	중지
		조성중	후관동	1981	D	개축	공사	중지
		여수여자중	별관동	1985	D	개축	설계	사용
		남주중	별관동	1981	E	개축	공사	중지
		우수영중	본관동	1968	D	개축	설계	사용
		문태중	본관동	1974	D	보강	설계	사용
		완도수산고	해관관실습실	1973	D	개축	설계	사용
		조성고	본관동	1974	D	철거	설계	사용
		보성정보통신고	본관동	1978	D	개축	공사	사용
	보성고	본관동	1974	D	개축	공사	사용	
	보성고	별관동	1994	D	개축	공사	사용	
	별교상고	후관동	1980	D	개축	공사	사용	
	영암고	본관동	1973	D	보강	설계	사용	
	영암고	별관동	1977	D	개축	설계	사용	
	순천매산고	후관동	1979	D	보강	설계	사용	
	장성교육지원청	본관동	1979	D	보강	공사	사용	
	진도교육지원청	본관동	1968	D	개축	설계	사용	

(자료: 이현승 새누리당 의원실)

#. 지난 18일 찾은 광주시 북구 중흥동 평화맨션은 썰렁했다. 아이들이 뛰어놀던 놀이터, 빈 공간이 없을 정도로 승용차로 가득 찼던 주차장도 텅 비어있었다. 아파트 입구에는 '출입금지' 현수막이 붙었고 현관은 자물쇠가 채워져 있다.

경찰도 주민들이 몰래 들어갈 수 있는데다, 빈 집이 많아 절도범의 표적이 될 지 모른다는 판단에서 배치했던 순찰 인력을 절수시켰다.

지난 7월 24일 아파트가 '쿵'소리와 함께 붕괴 조짐을 보이면서 긴급 대피했던 60세대 주민들은 3개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보금자리로 돌아가지 못한 상태다. 아파트 지하 기둥이 어느날 하중을 못이겨면서 내려앉았고 깃들려 어긋난 부분에서는 콘크리트가 부서져 내려 철근이 그대로 노출됐다. 설마 하는 안일함과 안전에 대한 투자를 등한시했다가 훨씬 더한 고통과 비용을 치르고 있는 셈으로, 자체 안전진단 종합평가 결과, B등급을 받은 아파트가 이렇다.

#. 광산구 소촌동 5층짜리 연립주택 상황도 불안하기만 하다. 반쪽으로 케이크 찢리듯 나뉘어진 건물 한 쪽은 공사장 가림막과 흉칙한 비계가 드러나있지만 다른 한 쪽은 주민들이 버티고 살고 있다. 포크레인 소리가 끊이질 않고 벽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건설 현장에 주민들이 불안함을 안고 살고 있는 것이다. 준공 승인도 나지 않은 건물에 일부 주민들이 건축주 허가를 받아 불법으로 입주, 지난 8월부터 '불안한 동거'를 하는데도 누구 하나 나서지 않고 지켜보지만 하는 게 벌써 3개월째다.

세월호 침몰 참사 이후 '안전'을 외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지만 '안전 무개념'은 여전히 있다. '괜찮겠지'하는 안일함과 무신경함이 맞물리면서 안전에 대한 투자를 뒷전으로 미룬 채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한 건물에서 살고 있는가 하면, '별일없겠지'라는 근거없는 낙관주의에 기댄 채 생활하는 '일상 속 안전 불감증'도 탈락하지 않았다.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질서 의식을 생활화하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안전 관련 담당자들이 단속을 게을리하거나 눈감는 경우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15년된 아파트만 1145곳=28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광주 지역에서 건설된 지 15년 이상된 공동주택(15층 이하)은 1145곳

으로, 시설물 안전등급(A~E)에 따라 서둘러 보수·보강을 하는 등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되는 D등급 아파트는 4곳이다.

소방방재청의 시설물 안전등급의 경우 아파트별로 자체 점검을 거쳐 보고한 안전 등급이라는 점에서 무작정 D등급 이상을 안전하다고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최근 붕괴 조짐이 발생하면서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던 북구 평화맨션도 자체 안전 점검 결과, B등급(양호한 상태) 판정을 받았었다. 해당 아파트는 지어진 지 33년된 아파트였음에도, 광주시의 노후 서민아파트 시설 개선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광주시가 예초 '2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한 시설 개선 사업'을 벌인다고 밝혔음에도, 사업 내용이 예산 형편을 내세워 자전거 보관대 보수·옥상 방수·건물 외벽 도장공사 등에만 치중돼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겉핥기식' 시설 개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집단 거주시설의 경우 자치단체와 소방방재청 주도로 정기적인 정밀 안전 진단이 의무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오래된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과 통행이 빈번한 다중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도 마찬가지다. 시·도 교육청이 초·중·고교 등 교육 시설물을 대상으로 재난 위험도를 진단한 결과, 전남지역 학교시설 중 26개 동(棟)이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돼 가장 많았다. 이들 시설 대부분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안전에 대한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다보니 지진에 대한 잠재적 위험요소를 없애기 위한 내진 설계에 대한 투자도 미흡하다.

광주지역 내진설계대상 공공시설물 649곳 중 내진 설계가 적용된 것은 41.4%인 269곳에 불과하다. 광주시는 매년 20억~170억원의 예산을 투입, 내진보강 계획을 세웠지만 실제 사업에는 투입하지 않는 등 우선 순위에 밀렸다. 민간 기업들은 더 할 것이라는 말이 나올만하다.

◇주민도, 민간·공공기관도 '책임 불감증' =혹시 있을지 모를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철저한 점검·관리를 빼놓을 수 없다. 시민들 뿐 아니라 시설물 관리에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행정당국이나 관리자들의 안전의식 강화는 무엇보다 강조된다.

하지만 건축주의 대충대충 시공과 감독 기관의 무책임한 관리 감독이 맞물리면서 빚어지는 구조적 비리는 쉽사리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당장, 광주시 광산구 소촌동 476-1번지 일대 5층 규모 연립주택(연면적 1553㎡·16세대)의 경우 건축주와 감독 기관의 안일함이 맞물리면서 준공을 앞두고 느닷없이 철거되는 상황이 빚어졌다. 광산구는 지난 2011년 건축허가를 내주고도 지난 7월 5층 건물 대부분이 준공될 때까지 파업조차 못했다가 뒤늦게 해당 건물의 위험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뤄졌다.

앞서 광산구는 수원지구 내 완공되지 않은 무허가 불법건축물에 대한 사전사용승인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담당 공무원들이 적발되는가 하면, 업무상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향응을 제공받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할 행정당국이나 관리자들의 안전의식도 나아지지 않았다는 얘기가.

공무원들의 철저한 현장 점검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건축주와 건축사의 불법 행위를 막지 못했던 사례도 잇따랐다.

지난해의 경우 원룸을 신축하면서 쪼개기, 불법 용도변경 등으로 허가 면적 이상 증축하거나 가구수를 늘린 '원룸 폭방'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데도, 실태파악조차 하지 못해 부실한 관리·감독을 했다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광산구는 올 들어서만 구 소속 공무원 13명이 뇌물·직무유기 등 비리 혐의로 적발돼 수사·재판을 받고 있으며 건축 분야에서만 6명이 부적절한 행위로 도마에 올랐다.

/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이 기획 시리즈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1·2층 이태리가구

3층 통원목가구

4층 모던가구

5층 던롭침대

30%▶

홍스케이스

SINCE 1990

www.hong79.com

광주 동구 장동 58-15

☎1899-0240

세계 최고 던롭침대 1년
한번 세일 11월 16일까지